



국회 정부위원회 여야 간사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 규명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 추경, 후 청문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등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며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 /연합뉴스

‘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 평행선...추경 ‘스톱’

야 ‘최·중·택 트리오 나와야...합의 없인 협조 불가’

여 ‘先 추경 後 청문회’ 고수...당정, 플랜B 마련 검토

오는 22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 청문회(서별관회의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연동되면서 파국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경안과 증인 채택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추경 처리 불발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7일 예결위의 추경 심사를 중단하는 등 실행사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지연 사태와 관련, “추경의 골든 타임이 놓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예결위가 재가동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미 ‘선(先) 추경-후(後) 청문회’에 합의했고, 이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야당이 추경 처리의 발목과 손목을 다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여권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획재정부가 본예산을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22일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포기하는 ‘플랜 B’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경 편성의 가부(可否)를 모두 상정해 ‘투트랙’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국회 일정에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엄청난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 국책은행이 전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부실을 해결하지 못했던 과정과 그 부실 때문에 다시 또 추경이란 이름으로 다시 세금이 퍼부어져야 하는 상황을 규명하지 않은 채 추경을 요청적으로 통과해달라는 게 정부 여당 태도”라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안중범 정책조정수석·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중택 트리오’가 서별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

다”며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인이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염려한 대로 망신을 주고 소리를 지르기 위해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고통을 분담하고, 노동자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밝히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아 추경안 처리가 9월까지 늦춰질 게 된다면 내년 본예산 편성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본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9월 2일로 작년보다 9일 앞당겨 졌다는 점에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본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기요금 누진체계, 백지상태서 재검토”

당·정 TF 첫 회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18일 첫 회의를 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TF공동위원장인 이재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포함한 김광립 정책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

과를 하고 누진제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정·교육·상업·농업·산업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재검토 후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폭염이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국민께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전기요금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했다.

주 장관이 누진제 논란과 관련한 입장

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차원에서 도입됐는데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립 정책위원장은 “100여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참 덥다. 전기요금을 7~9월 3개월간 2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 가까이 내렸다”며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도별로 요금부과체계 전반을 훑어보고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분류되는 상업·교육·농업·가정용 전부에 대한 요금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누진체계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찜통더위에 어려움을 겪게 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잘 안다.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내일 JP 만난다

국민의당 “예정된 일정”...정치권 예의주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를 예방한다. 박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김 전 총리의 중구 청구동 자택을 찾을 예정이라고 국민의당이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이전부터 약속된 회동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을 맞은 즈음에 검사 겸사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 측 관계자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취임하면서 김 전 총리께 인사차 찾아뵙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왔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에서 김 전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할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예방은 ‘총정의 맹주’였던 김 전 총리가 지난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한 뒤 ‘총청대망론’이 탄력을 받는 등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터여서 정치권이 주시하고 있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호남 참여 연정론’을 주장한 바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35명 ‘사드 국회 비준동의’ 촉구

더민주 28명 참여...“특위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 35명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비준동의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는 사드 찬반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는 더민주 소속 의원 28명도 참여,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참여했고,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의원 6명이 전원 참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국가 주권에 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율리 의원은 “사드배치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성능이나 영향,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고 비준동의의 절차를 거쳐 사드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법안 제조기’ 주승용

19대 국회 157건 이어 20대 51건...초선 의원들은 저조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157건의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20대 국회 들어서도 무려 51건을 발의, ‘법안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주 의원의 법안 발의는 상임위(국토위)를 넘어 교육, 노동, 국방,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을 의정활동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좌진의 설명이다.

주 의원의 법률안은 가결률이 높은 편인데 이는 법률 개정과 관련, 우선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의 통해 1차 검토를 한 뒤, 법률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입장을 듣고 국회법제실에 성안을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된 과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주 의원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메모를 하는가

하면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따로 챙겨 수시로 검토하고 보좌진에 법률안 추진을 요구하는 등 일종의 ‘중독’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주 의원의 법률안 발의 행진은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의 눈총(?)도 사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갑)은 등원 이후, 단 한 건의 법률안도 발의하지 않았으며 일부 초선 의원들은 3~4건을 발의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진 의원이 이처럼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소위 ‘법안 발의의 생활화’가 된 것 같은데 초선 의원들에게 자극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